

“무등산 절경 망치는 묘 읍져달라”

신선대 위 버젓이...탐방객들 이장 요구 시·관리사무소 “후손 모르고 예산 없어”

최근 무등산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묘지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 부족 등을 핑계삼아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등산객 서모(여·45·동구 서석동)씨는 지난 13일 무등산(해발 1187m) 신선대 770m 지점 인근 등산로를 지나던 중 지름 1.5m~2m 크기의 묘지를 발견한 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수 차례 전화로 걸었으나 받지 않자 곧바로 광주시 당직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무등산 신선대에 조성된 묘지. 등산객들은 “협오감을 줄 수 있다”며 묘지 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제공>

민원 내용은 하루 평균 1000명의 등산객이 오가는 무등산 주요 탐방로인 신선대에 묘지 한기가 조성돼 있는데,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장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당직실 직원은 서씨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고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으나, 보름여가 지난 25일까지 시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선대에 조성된 묘지 주변에는 빈 술병·과자 봉지·음료수 병·캔 등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를 본 등산객들은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달 평균 네 차례 무등산 등산을 하는 박모(56·북구 운암동)씨는 “신선대에 묘지가 조성돼 있는 것을 보고 괘씸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등산로 곳곳에 무덤이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무등산에서 묘지를 만나면 기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이 등산객들이 묘지 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임의대로 개인 소유의 묘지를 없앨 수 없는데다, 묘지 연구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되기 전인 1972년 이전에 묘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생태계와 경관 복원을 위해 경주국립공원 등 전국 20곳 국립공원 안에 조성된 묘지 4만7000기에 대한 이장(공원구역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장을 원하는 가족들에게는 이장 비용이 지원되며, 불법묘지나 무연고 묘는 일정 기간 공고를 한 뒤 공동묘지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묘지 실태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립공원 지정 이후 묘지 실태파악에 나선 적은 없다”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처럼 공원구역 복원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과 현황은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유자가 67%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묘지를 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정병검사 체험 광주·전남지역 ‘청와대 푸른누리 어린이 기자단’ 30여명이 25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정병검사 체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8277) 김종두



전국 초중고 건물 ‘내진설계’ 재조사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학교건물 내진설계 계획을 세워 2015년까지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5곳 중 1곳은 내진 설계를 갖추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5일 충남 대천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수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열고 지진 방재대책 및 내진보강 계획 등이 담긴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4월1~5월20일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없는 죄 뒤집어 씌운 고문경관 징역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25일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직권 남용)로 추가 기소된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모(42)씨와 팀원 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성씨 등은 2010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로 데려온 다음 수갑을 채운 채 양팔을 등 위로 꺾어 물리는 고문을 하고 겁에 질린 이씨를 미해결 절도사건 51건의 피의자로 조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명을 미해결 절도사건 116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대 못 내 것인줄 알았다”

○...술에 취한 20대가 원룸에서 공동으로 쓰는 빨래 건조대에 걸린 다른 사람의 빨래를 가져갔다가 경찰서행.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유모(20)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5분께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한 원룸 1층 빨래 건조대에서 지모(20)씨의 타셔츠와 청바지 등 시가 40만원 상당의 옷 10점을 가져갔다는 것.

○...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부 소행이라고 판단. 원룸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유지를 붙였었는데,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동생이 빨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상습음주운전자 대중교통 취업 제한 과속기준 4단계로 세분화 처벌 강화

앞으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에서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환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화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직업운전자 취업을 제한한다.

아울러 현행 과속기준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km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박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스쿨존처럼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간에는 스쿨존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미취학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홈플러스 판매 사탕 8mm 크기 철사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가 국제제과회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자사브랜드(PB) 제품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에서 8mm의 가느다란 철사가 나온 사실이 확인돼 회수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제조사의 미흡한 위생관리 탓에 철사가 제조과정 중에 들어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물질 발견은 한 소비자가 사탕을 먹다가 제품에 박혀 있는 철사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 2011년 1월29일까지로 총 4천176kg 유통됐다.

필로폰 물에 타 마신 40대 목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목포경찰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해 마신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박모(44·경남 창원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8일 구속된 교도소 동기로부터 필로폰을 사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창원, 진해 등지에서 필로폰 매매 및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오현섭 징역 5년 추가 총 14년 6월

前여수시장 선거법 위반 등 이어 뇌물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은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 9년6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5년을 추가해 현 상태에서 모든 형이 확정되면 14년6월의 형기를 살게 됐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이며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 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고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시장으로서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 앞서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의 진행과 대금 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김씨에게

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이순신 관광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맡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건설 회장에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중)는 지난 11월 2010년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류 꾸며 국고보조금 8억원 골격

여수해양경찰은 25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타낸 고홍균 도 영어조합법인 대표 박모(57)씨와 법인 감사 박모(39)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공사 시공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담당공무원 유모(46)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초 14억원을 들여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개인명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선정되지 못할 것

을 우려, 어촌계 주관 사업인 것처럼 위장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8억 2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총 사업비의 40%인 자부담 능력이 없는 박씨 등에게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줘 이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황사일수 늘고 농도 짙어져

작년 12.3일 평년에 비해 8.6일 많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몽골 등지의 눈 녹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지난해에는 관측 일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황사 농도도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상청의 ‘2010년 황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20일 흑산도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 농도인 2712μg/m³(시간평균)의 황사가 관측됐다. 또 작년 11월11일 백령도에서는 봄이 아닌 계절에 관측된 황사 중 가장 짙은 1664μg/m³(시간평균)의 농도가 기록됐다.

지난해 연간 황사 관측일수는 12.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8.6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봄(3~5월)에 6.7일로 평년(3.5일)보다 3.2일이, 겨울(12~2월)은 3.1일로 평년(0.2일)보다 2.9일이 각각 많았다. 평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가을(9~11월)에도 2.5일이 관측됐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과 내몽골이 13회였으며 만주지역이 2회로 나타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식중독 사고 절반 봄에 발생

작년 7218명중 3002명 4~6월에

매년 식중독 사고의 40~50%가 봄철인 4~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 7천218명 중 4~6월 환자가 41%(3002명)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009년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 수 5999명 중 4~6월 54%(325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봄철은 벚꽃놀이, 야유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야외활

동이 많은 데다가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높지 않아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1회 분량만 준비해 급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는 것이 좋다. 또 장시간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차고 서늘한 곳에 음식물을 두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원원이나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할 때 물은 끓여 마셔야 한다.

/연행뉴스